

예결특위, '박근혜표 예산' 줄줄이 보류

野, '행복주택' '창조경제' 예산 전액 삭감 주장

정개특위 첫 회의…19일 소위구성 등 일정 합의

국회는 임시국회 이를째인 12일 예결특위와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우선 국회 예결특위는 오전 10시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재개, 정부 부처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벌였다. 이날 소위에서는 특히 창조경제·행복주택·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등 '박근혜 표' 사업 예산이 줄줄이 보류되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의 경우 대대적인 사업축소가,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개념의 모호성 논란이 각각 도마 위에 올랐다.

행복주택 예산은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 속에 행복주택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애당은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그동안 행복주택 사업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가 관련 예산을 정부안(9530억 원)에서 무려 5236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더 깎자는 요구가 있따른 것이다. 창조경제 사업에 대해서도 개념의 모호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면서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운영'(69억원), '창조경제 기반구축'(45억원) 등 관련 사업의 예산 처리가 줄줄이 보류됐다.

전날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예산 30억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창조경제 기반 구축' 예산 45억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불요불급한 일회성·전시성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래부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관련, 민주당 임대현 의원은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해서 이명박정부의 원격진료·녹색 성장체험 사업을 사실상 재활용해 창조경제 기반 구축 예산으로 내놓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예결특위와 별도로 국방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했고, 농해수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안심사소위를 열었다.

이날 특히 정개특위가 오후 3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부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관련, 민주당 임대현 의원은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해서 이명박정부의 원격진료·녹색 성장체험 사업을 사실상 재활용해 창조경제 기반 구축 예산으로 내놓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예결특위와 별도로 국방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했고, 농해수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안심사소위를 열었다.

민주당은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불요불급한 일회성·전시성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래부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관련, 민주당 임대현 의원은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해서 이명박정부의 원격진료·녹색 성장체험 사업을 사실상 재활용해 창조경제 기반 구축 예산으로 내놓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예결특위와 별도로 국방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했고, 농해수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안심사소위를 열었다.

이날 특히 정개특위가 오후 3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이미 자체적으로 인선을 완료한 위원장(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여야 간사(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았다.

정개특위는 산회 후 여야 간사가 별도 협의를 통해 오는 19일 소위구성을 위한 2차 전체회의, 26일 전문가 긴급회, 27일 및 내년 1월7일 공청회, 내년 1월28일 마지막 전체회의 등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유일하게 위원으로 활동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 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민주당-'안신당' 분화…양당 구도 재편 광주시의회

민주 소속의원 4~6명 탈당…시당 '집안단속' 나서

사실상 민주당 일당 체제였던 제6대 광주시의회가 '안철수 신당' 창당이 본격화되면서 분화하고 있다.

또한, 조만간 북구의회 문해옥 의원 등 광주지역 민주당 소속 일부 구의원들도 탈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탈당 지방의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이었던 서정성 의원에 이어 진선기 의원이 이날 민주당을 탈당함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교육의원 4명을 제외한 광주시의원 22명 중 현재 민주당 소속은 14명이 됐다.

홍인화 의원도 조만간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계획이고, 추가로 1~2명이 민주당 탈당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면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10명 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안철수 신당행이 예상되는 시의원은 이미 '안철수 실행위원'으로 선임된 이준문 의원과 서정성, 진선기, 홍인화 의원 등 4~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일부 시의원도 안철수 신당을 생각하고 있고 안철수 신당 과거력에 따라 추가로 합류하는 시의원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등 교육감의 정당공천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시의원과 교육의원들의 정치적 노선에 따라 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 대결구도가 가열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 중심의

이처럼 지방정부가 유통을 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은 이날 조찬모임을 갖고 민주당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기로 했다.

조찬모임에 참석한 조오섭 의원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호흡을 맞추고 광주에 맞는 민주당으로 태어나기로 했다"고 모임 분위기를 전했다.

광주시의회가 사실상 민주당 일당 체제에서 양당구도로 재편하면서 집행부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인 강문태 광주시장을 둘러싸고 시의회 내부에서 다양한 역학구도가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광주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강문태-이용섭' 2파전 또는 '강문태-이용섭-강기정' 3파전 양상이 전개될 수 있어 시의원들 간에 '지지성향'에 따라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일단 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 대결구도가 형성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각자도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최근 일부 시의원의 탈당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세정치'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 탈당이며, 지방자치와 한국정치의 발전보다 자신의 당선만을 노리는 정치행위임으로 시민과 당원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당은 "정치는 신의와 도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분들의 행위는 수십년간 민주당을 지지해 준 광주시민과 당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진중권 '내시' 발언' 지나쳤다"

지역민 "호남위해 뛰는 이정현 펌웨 안돼"

새누리 "정치권 막말·인신 공격 자제해야"

정치권이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설화(禡禱)'로 시끄러운 가운데 진중권 등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진중권에게 호남인사라는 점과 지난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이긴 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호남 예산 지킴이' 역할을 특별히 해낸 성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일부 지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배경에는 이 수석이 정부대수석 중 유일한 호남인사라는 점과 지난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이긴 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호남 예산 지킴이' 역할을 특별히 해낸 성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수석이 지난해 국회 의원 선거에서 '야권연대' 후보에 맞서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린 것도 이 수석의 부지런한 의정활동과 많은 지역 예산을 따른 것에 대한 사실상 지역민들의 '보은'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새누리당 후보가 민주당 탓발언 광주에서, 그것도 야권연대 단일후보에 맞서 40%의 득표율을 올린 것은 이 수석이 유일했다.

당시 총선에서 이 수석이 패하자 일부 지역민들은 "이제 새누리당도 한 명은 광주에서 당선되어야 하는데, 이 수석이 당선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가원수를 모독한 막말이라, 대선 불복심 발언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장외 규탄대회 등 당력을 충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2일 전국 240여개 당협위원회에 중앙당에서 제작한 홍보물과 현수막을 배포하고 시·도당별로는 릴레이 장외 규탄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의원 개인의 발언을 이유로 집권 여당이 광주 보이콧에 이어 장외 규탄집회까지 한 대에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회 상시출입 폐지·직원 정치개입 금지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

용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자체개혁안에서 국정원 전(全)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퇴직 직원의 경우에도 퇴직한 지 3년 동안 정당가입과 활동이 금지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업계 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 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며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정치개입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급매”

1층상가 - 25평

- ▶ 정문코너, 편의점 임대 중 (보3천만원에 월 125만원)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7,500만원

13층 - 오피스텔

- ▶ 53평, 주거겸 사무실
- ▶ 코너, 양동/하천쪽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5,000만원

10층 - 오피스텔

- ▶ 29평, 주거겸 사무실
- ▶ 하천쪽, 전망좋음
- ▶ 시세 1억원 정도
- ▶ 급매 6,100만원

→주인직매함
H.010-4667-9300

경매투자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실전사례 중심교육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천경매 H.010-3605-5000